

전남 종합

임금체불 신고 폭주 “어찌 하오리까”

노동부 목포지청 하루 30~40건 ... 조사관은 고작 5명

고소·고발 500여건 미결... 인력충원 절실

목포·신안·영암 등 서남권 지역기업들의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임금체불 고소·고발이 폭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노동부 목포지청 조사관은 5명에 불과해 인력충원이 절실하다. 이로 인해 목포지청 직원들은 격무에 따른 피로와 몸살에 시달리고, 체불업체 근로자들은 체불이 계속되며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선박제조업체를 비롯해 건설, 요식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하루에 30~40건씩 임금관련 고소·고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노동청 목포지청 관할지역은 목포·신안·무안·진도·해남·완도·장흥·강진·영암 등 1개 시·8개 군에 달하지만 조사관은 겨우 5명에 불과하다.

조사관 5명이 하루 30~40건씩 폭

주하는 고소·고발 사건들을 밤 10시 까지 근무하면서 처리하고 있지만 역부족여서 지속적으로 500여건이 미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로 신고한 근로자들은 15일 이상 패어만 접수가 되고, 사건완료까지는 상당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신규 신고자들은 업무처리가 너무 늦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영세한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전국 43개 지청 중 목포노동청 관내가 임금체불 5번째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인은 지역 조선업체를 비롯해 요식업, 중소기업들이 경영을 지속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열었다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에 분석된다.

목포노동청 관계자는 “민원은 갈수록 폭주하고 있는 실정에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목포 중앙고 영상취재차량 도입

전국 최초... 학생 실무능력 향상 기대

전국 최초로 목포 중앙고등학교에 영상 취재차량이 도입돼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이 기대된다.

목포 중앙고등학교(이사장 김호남·교장 최성동)는 최근 우수학생 교우회위원장,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 취재차량인 도식을 가졌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영상 취재차량(미국 포드사 E-350)은 지상파 방송국에서도 현재 사용중인 모델로 방송촬영과 실시간 편집을

할 수 있는 각종 최신 취재장비 등을 갖췄다.

전남도 문화산업진흥원과 체결한 ‘스마트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폰 및 인터넷 생방송 송출까지 가능한 첨단 장비이다.

차량가격만 7500여만원에 달하며 2여명의 영상 기자재를 탑재했으며, 전남도교육청이 전액 지원했다.

이번 영상취재차량 도입에 따라 2010년 특성화 학과로 지정된 영상미디어학과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과 현장 중심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현 교장은 “취업중심의 특성화고가 가져야 할 가장 큰 과제인 실무능력 향상과 취업 경쟁력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여수 영·유아복지지킴이 개소

여수지역 영·유아 교육과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소가 지난 24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수 영·유아복지지킴이연구소는 이날 전남대 여수캠퍼스 인문사회과학관 5층 학술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번 창립총회는 ‘숲과 아이들의 행복한 만남’을 주제로 부산대 임재택(유아교육과·한국 숲유치원 협의 회장)교수와 부산대 부설 어린이집 배은진 원장의 초청강연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양호(한양대 유아교육과 교수) 영·유아복지지킴이연구소장은 “튼튼한 영·유아, 생명을 존중하는 영·유아의 성장을 희망하면서 영·유아 교육복지와 문화의 향유와 대안을 찾고자 연구소를 창립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씨 감자 심어요”

해남군 산이면 들녘에서 씨감자를 파종하는 농민들의 손길은 분주하다. 서로 마주보며 붙어있는 두 개의 삽이 땅에 구멍을 내면 위쪽 주머니에 감자를 떨어뜨려 구멍 속으로 들어가도록 고안된 장비가 눈길을 끈다.

<해남군 제공>

전문직 은퇴자들 ‘재능 기부’ 나섰다

복지관·박물관 등서 영어·문화 해설 전남 봉사단체 ‘남도친구들’ 110여명

전문직 은퇴자들로 구성된 전남 지역 봉사단체인 ‘남도친구들’이 본격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나섰다.

전남도 자원봉사센터는 최근 남도친구들을 대상으로 올해 운영 설명회를 갖고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남도친구들은 은퇴한 교수·교사·기업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남지역 봉사단으로 복지관이나 박물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영어·수학·문화 관광해설·바둑 및 장애인방과후 학습지

도 등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회원은 교육과학·관광문화·사회복지·통역 분야에 현재 111명이 등록돼 있다. 직업별로는 교수·교사 출신이 42명으로 가장 많고 회사원 34명, 공무원 25명, 금융인·경찰·간호사 각 5명이며 연령대별로는 75세 이상 36명, 65세 이상 61명, 65세 이하 14명으로 전년 대비 활동자 수가 14% 늘어나는 등 활동 영역이 날로 확장되는 추세다.

응모 자격은 전남에 거주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은퇴한 전문가로

도 등 각 분야에서 봉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규 회원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가입 신청은 전남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nanum.jeonnam.go.kr) ‘남도친구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남도 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남도친구들엔 1일 3시간 이상 봉사시 매달 15일 이내에서 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 1만원의 실비를 지급한다.

최영열 전남도 종합민원실장은 “남도친구들은 전문직 은퇴자들인 만큼 현장에서 노하우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월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북

“KTX 정읍역사 원안대로 추진”

국토부 “단순 철도역 아닌 지역성장 거점” 철도공단에 공문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호남고속철도(KTX) 정읍역사와 지하차도가 당초 협의안대로 추진된다.

전북도는 “국토해양부에서 KTX 정읍역사와 지하차도 개설을 당초 협의된 내용으로 추진토록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예산절감을 이유로 KTX 정읍 선상역사를 신축하는 대신 증축 모델링하고, 개설하기로 한 지하차도를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해왔다.

이에 전북도와 정읍시, 정지권, 시민단체가 공조체제를 구축해 집중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백지화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철도시설공단에 보낸 공문에서 KTX 역은 단순 철도역이 아닌 지역성장, 새만금개발, 권역연계 환승체계, 인근 토지 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당초 협의된 내용대로 선상역사와 지하차도를 추진토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변밀히 검토중에 있어 공식 입장을 내놓

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읍시, 정지권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반드시 협의안대로 추진되도록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은 오는 2014년 개통목표로 노반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정읍역사 신축에 521억원, 중앙 지하차도 개설에 8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s

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 증가한 533만4000 달러로 일본시장 비중이 높은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전략시장으로 떠올랐다. 중국시장 주요 수출 품목은 김, 파자루, 면류 등이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전북도 농수산식품 수출 전망 밝다

2월까지 2600만달러 기록 전년동기보다 62% 증가

올해 전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2월 기준 전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2% 증가한 2607만400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농수산식품 수출증가율 14.1%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출증가율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721만3000 달러 어치를 수출한 김(원초김·조미김)이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은 장미는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한

235만8000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국은 잠비·파프리카·김치 등을 수출한 일본이 837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태국·미국·대만



가야문화권 발전 협의회

가야 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23일 전북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협의회에는 광역(고령군수) 협의회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등 14개 시장·군수·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호남 상생발전 논의와 가야문화권 발전을 위한 안건을 놓고 협의했다.

/연남뉴스

단신

중기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추진

전북도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제품이 걸맞은 포장과 디자인이 미흡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4월 3일까지 개발지원을 희망

하는 도내 중소기업 30개 업체와 전문업체 7개 업체를 모집키로 했다. 선정된 업체에는 포장지, 카탈로그 등 4개 분야에 개발비 50~70%가 지원된다.

문의(063-280-3861)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군산해경, 7월까지 불법 조업 단속

군산해양경찰청은 7월 말까지 불법 잡수기와 잡수부 등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경은 최근 전북과 충남 서천군 연안 해상 등어류 생산지에서 불법 조업선들이 변형된 어구를 사용해 씩쓸이 조업 방식

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군산해경은 형사 기동정, 순찰정, 공기부양정 등을 동원해 해상 검문 강화와 도서지역 소규모 항포구를 중심으로 잠복·내사활동에 돌입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s

정읍시 공무원 ‘기술봉사대’ 발대식

정읍시 기술직 공무원들이 지역봉사 활동에 앞장서고 나섰다.

정읍시청 건축과 등 기술직 공무원 40여명으로 구성된 정읍시 공무원 봉사동아리인 ‘정읍사랑 기술봉사대’가 지난 24일 북면 한교리 학동마을에서 발대식을 갖고 올해 첫 봉사활동을 가졌다.

봉사대는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20세대 생활불편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봉사활동은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을 이용,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s

이태현 선생 유고집 ‘정암사고’ 발간

남원문화원은 남원출신 애국지사 정암 이태현 선생의 순국 70년을 맞아 유고집 ‘정암사고(精菴私稿)’를 발간했다. ‘정암사고’는 614페이지 단행본으로 정암 선생이 생전에 집필했던 ‘성사요결(性師要訣)’ 등 2편을 번역해

영인본과 함께 발간했다.

정암선생은 신사참배 거부와 우리말 쓰기 전개, 참서계명 반대 등 항일운동을 벌이다 33세인 1942년 주생 주재소를 찾아가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자결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김제 모악산에 자연 휴양림 만든다

문화관·체험장 등 조성

김제 모악산에 자연경관과 종교·문화자원을 접목한 자연 휴양림이 조성된다.

김제시는 “모악산 일원 시유림(금구면 선암리 90번지)내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지구지정이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자연휴양림 지구지정 고시를 위해 시는 지난해 8~11월 타당성 및 환경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전북도의 의견서를 첨부해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승인을 요청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시는 앞으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53억원의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문화관과 산막, 관찰로, 모험 체험장 등 다양한 휴양·체험 시설을 조성한다.

이 밖에도 시는 원할하고 빠른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2011년도 사방댐 시설 1개소를 조성했으며 올해에도 임도 1개소, 계류보전 1개소 등을 추진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앞으로 평야지역을 대표하는 특화형 산림휴양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 위반

김제시 등 개발사업 제한

환경부는 1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2005~2010년)를 위반한 김제시 등 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6개 지자체의 개발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량(BOD 기준)을 해소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과 상업 관광단지개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에 대한 신규 승인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시는 가축사육 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

설 준공이 지연되면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제시가 계획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은 9건이며, 행정제재 대상지역은 금구면과 신동동 등 16곳이다.

김제시 전기택 환경과장은 “올 하반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등이 완공되면 부족한 오염물질 삭감량(341.2kg/일)을 해소할 수 있어 제재에서 벗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